

주간 통일정세

2014-45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 북한, 연평도 포격 4년 맞아 "패전 교훈 잊지 말라"(11/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군이 21일 서남전선군 사령부 보도를 통해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를 앞두고 진행되는 우리 군의 서북도서 지역 전력 증강과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패전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전함.
 - 이어 통신은 성명에서 "우리 장병들은 괴뢰군부 호전광들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첨예한 열점수역에서 도발의 불장난을 벌여놓으며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해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북한 "남한 '유엔 인권결의' 추동질...전면 선전포고"(11/22,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2일 서기국 보도에서 남측이 미국과 함께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작 놀음'을 벌였다고 이는 "우리 제도,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전면적인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특히 남측에서 진행 중인 북한인권법 처리, 북한 인권사무소 설치 등의 논의를 '광란 소동'이라고 비난하며 남측을 '국제적인 반공화국 인권 모략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호국훈련 연일 비난... "남북관계 최악의 위기"(11/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온 민족이 힘을 합쳐 미제와 괴뢰패당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수자'라는 큰 제목 아래 2건의 기사·논평을 싣고 호국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 먼저, '전쟁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고의적 도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호국훈련은 "고의적인 북남관계 파괴책동"이라며 이로 말미암아 남북관계가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함.

- 이어 '호국훈련의 침략적 정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이번 호국훈련은 사상 최대 규모의 '북침전쟁도발 소동'이라며 방어를 위한 훈련이라는 남측의 주장은 '퀘변'이라고 주장함.

■ 북한 "대북전단은 인권모략...남북관계 위해 중단해야"(11/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변함없는 대결정책과 인권모략의 산물'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과 남의 대화와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속에 품은 칼부터 버리고 반공화국 뼈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적 행동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신문은 대북전단 살포가 반복 '인권모략 소동'의 한 고리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전단 살포를 포함한 '적대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북, 영변 재처리시설 재가동 준비 가능성 (11/19, 38노스)

- '38노스'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건물과 남동쪽으로 접한 건물의 대형 냉각탑에서 증기가 관찰됐다"며,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운데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을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을 수 있다고 분석함.

■ 국방부 "한미, 북한 핵시설 가동·운영 계속 주시"(11/2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김민석 국방위 대변인이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 시설 가동이나 운영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외무성이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강력 반발하며 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행위는 정말로 배격돼야 한다"고 발표했음을 20일 보도함.

- 이어 뉴스는 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38노스'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운데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을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을 수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한 것과 관련, "우리 군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북한 핵실험장이 위치한) 풍계리에서도 현재는 특이동향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전함.

■ "북한, 잠수함미사일 발사관 지상실험 실시"(11/21, 워싱턴프리비컨)

- 연미국의 보수성향 매체 '워싱턴프리비컨'은 미국 정보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보 당국에서 지상에서의 SLBM 사출 모의실험이 지난달 말 실시됐음을 포착했다"고 21일(현지시간) 전함.
- 관리들은 이 실험이 "발사 과정의 초기 단계"라면서도 북한이 "잠수함에서의 핵공격 능력 확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北, 금강산 공동행사 보도... "김정은, 커다란 관심"(11/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금강산 관광 시작 16돌 기념 공동행사가 18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 진행됐다"며 북측에서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전함.
- 통신은 행사에서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과 황호영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장이 연설했으며, 연설을 통해 "김정은 원수님께서 현대와 금강산 관광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주고 있다"며 "북과 남이 힘을 합쳐 금강산 관광길이 하루빨리 다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전함.
- 이어 행사 참가자들이 공동식수를 했으며 현대그룹 관계자들이 금강산지구의 시설물을 돌아봤다고 덧붙임.

- 개성공단에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장비 오늘 설치(11/2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통일부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경의선 육로 북측 통행검사소 입경동에 거치식 열감지 카메라 3대를 설치하고, 북측 인력에 검역장비 사용 방법을 교육한 다음 돌아올 예정이라고 20일 보도함.
 - 뉴스는 북한이 지난달 29일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체온 검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정부에 검역장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검역장비는 총 4천500만원(대당 1천500만원)가량으로, 북측에 일정 기간 무상 임대된다고 덧붙임.

바. 남북 사회 관계

- '이희호 여사 방북' 실무협의 21일 개성서 개최(11/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오늘 통일부는 이희호 여사 방북 협의와 관련해 이희호 여사 측 관계자의 21일 개성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고 전함.
 - 뉴스는 이에 따라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 박한수 김대중평화센터 기획실장 등 김대중평화센터측 관계자 7명이 육로로 개성에 들어가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방북 시기와 인원, 동선 등 구체적인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이어 뉴스는 김대중평화센터측이 이번 협의에서 북한 영유아를 위한 모자 등 물품 지원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임.
- 통일부, 남북청소년교류사업 협의를 위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개성방문 승인(11/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9일 통일부가 남북청소년교류사업 협의를 위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관계자들의 개성 방문을 승인했다고 보도함.
 - 뉴스는 이에 따라 이운식 사무처장 등 민화협 관계자 3명이 20일 개성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내년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청소년교류사업과 관련한 일정과 장소, 참가인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함.

- "北, 고령 이 여사 평양방문 환영"...실무협의단 방북(11/2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방북 관련 실무 협의를 할 김대중평화센터와 '사랑의 친구들'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9시 30분께 방북길에 올랐다고 보도함.
 - 뉴스는 사랑의 친구들 회장인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이 이날 출경 직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에서도 이희호 여사가 고령이신데 평양을 방문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전해왔다"면서 "이 여사님이 평양에서 어린이 보육시설 몇 곳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함.
 - 이어 실무협의단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해 윤철구 김대중평화센터 사무총장, 이정원 사랑의 친구들 사무총장 등 모두 7명으로 개성공단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소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양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시기·경로·지원 물품 등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南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北 단군민족통일협의회, 11월 17일 '을사조약(1905.11.17)' 109주년 즈음 '일본의 과거청산 회피' 비난 및 '△외세 배격(미군 철수)·우리민족끼리 입장견지, △한미 합동훈련 반대·남북 관계개선(빠라살포·인권소동 분쇄) 투쟁' 선동 <공동호소문> 발표(11.17, 중앙통신)
- 통일부 장관(11.4, 주한 공관 대사 대상 정책설명회) 등 우리 당국의 '北,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무산' 비판에 대해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저들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책임 전가 지속(11.17, 평양방송)
- '남한 당국이 빠라살포를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남대화·관계개선은 없다'고 재차(11.15, 北 국방총 정책국 대변인 성명) 강조(11.17, 평양방송)
- 韓美 연합 '맥스썬더훈련(11.14~22)' 실시 관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노력에 대한 우롱이고 악랄한 도전이며 정세파국을 부채질하여 새 전쟁의 불집을 터치기 위한 고의적인 도발'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대화가 아니라 외세와 야합하여 공화국을 무력으로 해치려는 것'이라고 왜곡 비난(11.18,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방위사업청이 내년도 예산에 '전단탄'(대북전단을 더 정확하게 북한에 보낼 수 있는 포탄) 개발비로 18억 3,500만원을 편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려는 고약한 심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빠라살포가 계속되는 한 북남대화나 관계개선은 절대로 없다'고 비난(11.19, 중앙통신·민주조선)
- 남한 당국이 <2014 호국훈련>을 실시하면서 '국제무대에서는 東北亞의 평화와 협력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온 거래와 국제사회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라고 비난(11.20, 중앙통신)
-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결성('90.11.20) 관련, 지난기간 '조국통일운동 투쟁' 치하 및 "현시기 반통일 세력의 동족대결 책동을 짓부시고 북남선언들을 고수 이행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주장(11.20,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평통」 대변인 성명(11.21)】 연평도 포격전 4주년 보수단체 규탄행사 관련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당국에 의해 계획된 정치적 도발'이라고 왜곡 및 '최고존엄을 모독 중상한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11.21,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現 남북관계 책임을 우리 당국의 '反北 적대행위(2014 호국 훈련 등, 빼라 살포, 인권문제 제기)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 및 '南 당국이 대결소동을 강화한다면 남북대화 관계개선의 문은 열릴 수 없다'고 강조(11.23, 중앙통신·노동신문)
- 통일연구원의 '사이오 인권포럼(11.13~14)'·北 인권사무소 설치 결정 등 우리 정부의 '北 인권문제 제기'를 "희세의 광대극·최악의 정치적 도발, 체제통일 망상실현 음모책동"이라고 비난(11.23,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UN 인권결의안 배격...전쟁억제력 강화할 것"(11/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전하며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의 강압 통과를 전면 배격"할 것 이라고 보도함.
 - 이어 통신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된 것을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전쟁 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전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 노동신문 "을사조약은 불법...日是 과거 청산해야"(11/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을사조약 109주년을 맞아 게재한 '날강도적으로 조작한 불법무효한 조약'이라는 글에서 "'을사5조약'은 명백히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난폭하게 유린하면서 허위날죄되고 일방적으로 공포된 허위문서"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을사조약(1905년 11월 17일)은 불법이라며 일본에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라고 촉구함.

- 이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일본은 이것을 명심하고 과거 을사5조약 날조범죄를 성근하게(성실하게) 인정하고 과거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北 신문, 연일 美 역사 거론하며 '인권 역공'(11/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미국을 겨냥한 '세계 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유린의 왕초'라는 제목의 코너에서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흑인 노예해방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863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발표한 노예해방선언을 "북부의 산업 부르주아들이 남부의 노예주들을 물어메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으로 몰아붙이며, 미국을 태생적인 '인권유린국가'로 비난함.
- 북한, 미국 '비핵구상' 비난... "핵억제력 정당성 반증"(1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비핵세계 구상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북핵 위협'을 구실로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거짓말쟁이의 본색을 드러낸 이 망발은 우리의 핵 억제력의 정당성을 다시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신문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핵무기 전력운용 시스템개선 계획은 미국 정부가 내세워온 비핵화 구상과 모순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을 무장 해제하고 핵무기의 현대화·상용화를 발광적으로 다그치고 있다"고 비난함.
- 북한 국방위 "인권결의 배격... 초강경대응전 진입"(11/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는 23일 성명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유엔 무대를 악용해 조작해낸 인권결의를 전면 거부, 전면 배격한다"며 이같이 선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특히 "며칠 전 오바마의 친서까지 들고 찾아온 미국 고위관리들을 아랑 있게 대해주었고 여러 명의 미국 국적의 범죄자에게도 인도적인 관용을 베풀어주었다"며 "그러나 미국은 대조선 인권소동에 광분하는 것으로 응수했으며 그로 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세례를 받을 첫 과녁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함.

- 이어 "대조선 인권결의를 두고 그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까불며 입을 다물 줄 모르는 박근혜 패당에게 따져 묻는다"며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고 반문함.
- 한편 국방위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투표를 한 러시아와 중국 등을 지칭, "의롭고 대 바른 여러 나라가 미국 주도하의 대조선 인권소동에 반기를 들고 사태 수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였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클래퍼 "북한 관리들, 만찬때 인권 개입말라 비판"(11/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이달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했던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 시사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관리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비판했다고 전했음을 17일 보도함.
- 북한 "미국이 인권결의안 강압...제한없이 대책 강구"(11/22, 민주조선; 노동신문)
 - 민주조선은 22일 미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비난하며 모든 대책을 동원해 이에 대응하겠다고 뜻을 밝힘.
 - 논평은 북한인권결의안에 표결에 참여한 국가 중 상당수가 경제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미국과 일본의 '위협' 탓에 찬성했다고 주장하고 "공정성이 완전히 무시되고 돈을 걸고 벌어지는 정치적 헐잡놀음"이라고 비난함.
 - 노동신문도 22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라는 제목 아래 4개의 논평·논설 등을 싣고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거듭 비난했으며, '또다시 입증된 우리의 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인권결의안 통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본격적인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고

'반공화국 인권결의는 날조로 일관된 모략문서'라는 제목의 논평은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북침전쟁의 서막'이라며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함.

마. 대중국

- 중국, 北 핵실험 위협에 "정세완화해야"(11/2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중국 정부가 북한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각국이 정세 완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고 20일 보도함.
- 중국, 북한 접경서 한국계 미국선교사 정식 체포(11/21, AFP; 연합뉴스)
 - AFP 통신은 장페이홍(張培鴻) 변호사가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이 북한 접경에서 기독교 선교활동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기독교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펼쳐온 한국계 미국인 피터 한(74)이 지난 18일 지린(吉林)성 옌벤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에서 횡령과 송장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고 21일 보도함.
 -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하여 한 소식통 인용해 "그가 지난 8월께 부인과 함께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탈북자를 교육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또 다른 소식통은 "최근 중국 당국이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외국인들의 활동에 대해 부쩍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고 21일 보도함.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푸틴 대통령, 북한 특사 최룡해 접견"(11/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김정은 黨 제1비서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18일(현지시간) 크렘린궁을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면담했음을 19일 보도함.
 - 뉴스는 18일 면담이 언론 초청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푸틴 대통령과 최 비서의 상세한 면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 비서가 푸틴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고 최근 들어 긴밀해지는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함.

- 러시아 외무장관, "푸틴 대통령, 김정은과 정상회담 준비돼 있어"(11/2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黨 제1비서의 특사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회담한 뒤 단독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최고위급을 포함한 북한과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접촉을, 양측이 합의한 시기에 진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다고 21일 보도함.
 -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도 논의했다면서 "북한 측은 회담에서 2005년 9월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성명에 기초하여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러시아는 이 같은 북한 측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이 중요한 정치 과정을 재개하기 위한 합의를 찾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함.
 -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러-북 통상경제관계는 이미 진행 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을 포함해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개성공단에 러시아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달 말로 예정된 하산-나진 구간 철도를 이용한 석탄 시범 운송 행사가 끝난 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중단철도(TKR) 연결을 위한 구체적 작업이 시작되길 기대한다"면서 "북한 측도 이 사업이 성공하면 다른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음을 전함.
 - 또한 최근 유엔 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선 '비건설적'이라고 비판했으며,

"러시아는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며 "인권과 자유 문제를 다루는 유엔 기구가 감찰기관으로 변질돼선 안된다"고 지적함.

- 북러 군 부총참모장 회동... "군사협력 강화"(11/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특사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함께 방러 중인 노광철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러시아 측과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보도함.
 - 통신은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노 부총참모장이 지난 19일 모스크바에서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을 만났다고 "쌍방은 조로(북러) 두 나라 군대 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데 대한 의견들을 폭넓게 교환했다"고 밝힘.

아. 국제기구

- 북한대표부 "어떤 상황 벌어질지 두고보면 알 것"(11/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오전 '책임문제와 ICC 회부' 내용을 빼고 쿠바가 제출한 수정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부결되었다고 19일 보도함.
 - 뉴스는 유엔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북한 최고지도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이 기성사실화하자 북한 유엔대표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전함.
 - 이어 뉴스는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북한 김 성 참사관이 부결 직후 북한 대표부 앞에서의 '수정안 부결은 사실상 결의안 원안의 채택을 의미하는데 북측의 대응책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처음에는 굳은 표정으로 답하지 않다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두고 보면 안다"며 목청을 높였음을 전함.
- 북한 최명남 부국장 "그 사람들이 대결을 선포했는데..."(11/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통과되자, 북한 대표들은 국제사회가 대결을 선택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고 19일 보도함.

- 이어 뉴스는 결의안 통과 이후 발언권을 얻은 최 부국장이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답했으며,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스타브로스 람브리니스 EU 인권특별대표의 방북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게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대결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결을 선포했는데..."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 북한 인권문제, 안보리가 나설 차례(11/20, 워싱턴포스트)

- 워싱턴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라면 세계와 역사를 위해 그렇게 기록되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이면서 북한의 반(反) 인권 범죄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나서야 한다고 강한 목소리로 촉구함.

자. 기타 국가

■ 북한군 2명 사격훈련 시킨 스위스 장교 경징계 처분(11/17, 트리뷴 드 즈네브)

- 트리뷴 드 즈네브 신문은 스위스 군검찰이 17일(현지시간) 지난 5월 제네바 안보정책 센터(GCSP)의 교육과정에 참가한 북한군 장교 2명에게 사격 훈련을 시킨 스위스군 대령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17일 보도함.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80호(11.22)】 우리 정부가 미국에 추종하여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작놀음을 벌렸다'며 이는 '우리(北) 제도, 인민을 반대하는 전면적인 선전포고'라며 '인권의 미명하에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11.22,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 정부의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일본과 사전협의 없이 자동개입 한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장본인으로서의 미국의 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비난(11.22, 중앙통신)
- 미군의 6.25전쟁 당시 북한군 전쟁포로 대상 "인권유린만행(강제역류 등 국제법·전쟁법규들 유린)"을 주장하며 미국의 '北 인권문제 제기 및 인권재판관 행세' 조소(11.23, 평양방송·노동신문)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또 軍 식품공장 시찰... '군인복지' 행보(11/17,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의 수행하에 현대화 작업을 마친 북한군 제534부대 산하 종합식료가공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함.
 - 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최근에 이 공장을 비롯해 인민군대의 후방기지들을 먼 훗날을 내다보며 현대화함으로써 올해가 우리 군인들을 위한 후방 토대의 기초를 튼튼히 다진 해로 됐다"고 강조하면서, "현대화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입장을 바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높은 민족적 자존심과 불타는 애국심에 의거해 현대화 사업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독려했음을 전함.
 -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방문한 제534군부대가 보급을 담당하는 후방총국 부대로, 평양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작년 5월 이 공장을 방문해 식품의 품질 제고를 위한 현대화를 지시한 바 있다고 17일 보도함.

- 北 김정은 軍 수산물공장 시찰... 김여정 동행(11/19,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박정천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 김양건 당 비서, 오일정 당 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박명철,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함께 "인민군 제567군부대 관하 18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전함.
 - 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이 사업소의 성과를 치하하며 이는 "패배주의에 빠져 우는소리만 하며 당정책을 말로만 외우는 사회의 일부 단위들과는 달리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실천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각오와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함.
 - 노동신문도 19일 3개 지면에 걸쳐 물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작업장과 이를 둘러보고, 주민들 무리 속에서 이들과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는 듯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모습이 담긴 사진 30여장을 게재하며 '인민 친화적'인 최고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여 전함.

- 이와 관련하여 연합뉴스는 여동생 김여정이 주요 생산시설 현지지도 수행 명단에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음을 19일 보도함.
- **北 김정은, 북쪽 변방 공군부대 시찰·훈련 독려(11/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박정천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과 함께 북쪽 변방의 '오중흡 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를 방문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전투기 조종사들의 학습·훈련시설인 '비행대대강실'과 '비행조종연습종합강실'을 둘러보고 "비행사들을 언제 어느 때 그 어떤 불리한 정황과 조건이 조성돼도 자기 앞에 맡겨진 전투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키자면 비행조종연습기재에 의한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함.
 - 이어 이 부대가 '정상적인(변동없이 정상적으로 계속되는) 동원 준비'를 잘 갖춘 점을 치하하고 "외진 북변에 위치한 군부대인 것만큼 후방공급사업과 생활조건 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 우선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임.
- **북한 김정은, 연합훈련 참관·"군종 병종간 협동"(11/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연합협동훈련을 참관하고 각급 부대와 지휘관들의 작전지휘능력 향상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 제572대연합부대와 제630대연합부대 관하 부대들의 연합협동훈련을 조직·지도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시소에 나가 훈련계획을 요해(파악)하고 훈련개시 명령을 하달했다"고 전함.
 - 통신은 이번 훈련이 "새 연도 전투정치훈련에 진입하는 전군을 다시 한 번 각성시키고 훈련제일주의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강조함.
 - 김 제1위원장은 훈련을 마치고 나서 앞으로는 불시에 훈련을 조직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훈련과 같은 연합협동훈련을 자주 진행해 군종, 병종 부대들 사이의 긴밀한 협동을 완성하고 전투행동의 불의(불시)성과 신속성, 일치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함.
 - 김 제1위원장의 이날 훈련 참관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오일정·한광상 노동당 부장 등이 수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김정은 세습' 정당화... "창창한 미래 확신"(1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백두산강국의 천년 미래를 열어 놓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김정일의 '업적'을 설명하며 "가장 빛나는 업적은 영도의 계승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논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과 꼭 같으신 또 한 분의 백두의 천출위인을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것은 군대와 인민의 최대 영광"이라며 '백두혈통'을 내세워 김정은 세습의 '정통성'을 부각함.
 - 또 논설은 김정은이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를 위한 중화학 공업에 우선 투자하는 '최상의 선택'을 했다고 치켜세움.

- 北, 김기남·최태복·박도춘 당비서,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참석 하에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 대학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 제막식 진행(11.19, 중앙통신)
- 박봉주(내각 총리) 등 국가책임일꾼들, 11월 19일 인민군 2월20일공장 참관(11.19,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의 혁명영도사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불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펼쳐주었다"고 '김정일의 선군정치 업적' 칭송(11.20,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246호(11.20), 김책공대 교육자살림집·연풍과학자휴양소·평양 육아원 건설자들에게 노력영웅 칭호 등 1441명에게 수여(11.22, 중앙방송)
- 北, "연평도 포사격전투 승리" 4주년 군민연환 모임, 11월 23일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진행 및 '자랑스러운 승리, 백두산 총대의 단호한 의지와 불패의 위력 과시(리성국)'라고 주장(11.23, 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후속 조치

- 北 신문 "건축물에서 김정은 시대 발전상 보라" (11/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참으로 멋있는 시대'라는 제목의 2면 정론에서 "건축만큼 나라의 발전 면모를 직관적으로, 종합적으로,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없다"며 "건축, 이것으로 우리는 조국의 솟구치는 기상과 힘을 말한다"고 강조함.
 - 이어 신문은 현재 북한에서 지열난방시스템 등을 갖춘 '녹색건축물'이 늘어나고 있고, 체육시설과 놀이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선 '다용도·다기능화' 건물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건축물의 성과를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 끝에 닿아 굳어진 인민사랑의 결정체"며 '업적'으로 치켜세움.

- 북한, 물고기잡이 독려...“황금해의 새 역사 펼쳐자”(11/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1면에 게재한 '물고기대풍으로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수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고 찬양하고, 수산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의 성과를 독려하면서 바다에서 '물고기 대풍'을 만들자며 어획량 증대에 힘쓸 것을 촉구함.
 - 신문은 군인과 주민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안기는 것이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의지라며 "우리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말로서가 아니라 높은 어로실적으로 충직하게 받들어 온 나라에 물고기대풍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게 해야 한다"면서 다음 달 17일 김정일 위원장 사망 3주기를 맞는 것과 관련해 "장군님께 더 높은 물고기잡이 성과로 충정의 보고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수산업의 과학화, 현대화를 강조하며 "최첨단 과학기술에 의거해 고깃배들의 성능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어구들을 현대화하며 선진적인 어로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시함.

다. 경제 상황

- 북한 "함흥-원산 잇는 7번째 고속도로 건설중"(11/23, 연합뉴스)
 - 북한이 항구도시인 강원도 원산과 공업지대인 함경남도 함흥을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이 외부에 배포한 원산 소재 현동공업개발구 투자 제안서에 따르면 "개발구가 원산항까지 6km, 원산-함흥 고속도로까지 12km 범위 내에 있어 대외적인 인원·물자·자금의 유출입에 매우 유리하다"며 원산-함흥 고속도로를 인근 주요 사회기반시설로 언급함.
 - 또한 흥남공업개발구로부터 15km 떨어진 곳에 "현재 건설 중인 원산-함흥 고속도로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완공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라. 대외 경제관계

- 북한-중국, 국경교량 연결사업 속속 '재점화'(11/1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중국 지린(吉林)성 정부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압록강변의 지린성 지안(集安)시와 북한 자강도 만포시를 연결하는 지안-만포 대교의 접속교량·도로 설계 입찰공고를 냈음을 18일 보도함.
 - 이어 뉴스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지방정부들이 내륙에 있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북한과의 교류 확대와 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내세워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 사업 승인을 받아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 美전문가, "제재대상 북한기업, 중·러에서 영업활동"(11/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미국의 동아시아문제 전문가인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과 캐서린 딜 연구원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조선연하기계가 중국 기업 1곳, 러시아 합작회사 1곳을 통해 영업을 지속했다"며, 사실상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 북한 기업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꾸준히 영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보도함.
- 러시아 건설사 시장 구속 불구, 북한철도 개보수 치질 없어(11/19, 인테르팍스통신)
 - 인테르팍스통신은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19일 진행된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젝트(북한 철도 개보수 사업)는 러시아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사인 브리지 그룹(Bridge Group)이 추진하고 있다"며 컨소시엄을 주도한 건설사 '모스토빅' 사장의 체포와 가택연금이 공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19일 보도함.
- 중국 최대 서점 프랜차이즈, 북한 진출한다 (11/20, 중국신문망, 연합뉴스)
 -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에 본사를 둔 중국 최대 규모의 서점 프랜차이즈 기업인 신즈(新知)집단유한공사가 지난달 19일 북한의 국립도서관인 평양 인민대학습당과 북한에 신즈집단의 대형 서점 '화문서국(華文書局)'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보도함.

- 연합뉴스는 20일 보도를 통해 신즈집단유한공사가 올해 1월 북한 오륜무역총회사와 손잡고 쿤밍의 유명한 호수 관광지인 덴츠 부둣가에 북한식당과 미술·공예품 전시공간을 갖춘 '북·중 문화협력교류센터'를 개최한 적이 있으며, 화문서국은 도서뿐만 아니라 음반, 영상물, 문구, 스포츠, 야외용품 등을 취급한다고 덧붙였다.
- 북한 접경 중국 도시들 '경제합작구' 준비 가속 (11/20, 중국신문사)
 - 중국신문사는 지난 8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동북진흥 지원에 관한 중대 정책 의견'에 "요건을 갖춘 동북지역 접경 현(縣)·시(市)의 변경경제합작구 설립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관련 지방정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20일 보도함.
 - 매체는 또한 기존에 변경경제합작구 설립을 적극적으로 기획해온 지린성 지안(集安)시와 허룽(和龍)시가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미 지안시 정부는 변경경제합작구 건설사업을 이미 시 중점 프로젝트로 정한 상태이고, 허룽시는 변경경제합작구를 통해 철강, 기계, 전자, 국제보세물류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음을 전함.
- 북·러 경제 인사회동... "경제협력 강화" (11/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특사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함께 방러 중인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장이 러시아 측 원동발전상 알렉산드르 갈루슈카와 면담했으며, 경제·무역분야에서 두 나라 사이의 협조를 심화 발전시켜 실질적 결과를 더 많이 이룩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 했다고 21일 보도함.
- 러시아 석탄 4만, 北나진항 거쳐 29일 포항에 도착(11/2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통일부 관계자가 21일 남북러 3국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시범운송 사업이 내주 실시되며, "우리측 점검단은 러시아 철도공사와 합동으로 24~28일 방북해 석탄 하역 및 선적, 선박 입출항, 철도·항만 연결선 등 나진항과 연계된 육·해운 복합 물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기술적 점검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보도함.
 - 뉴스는 우리측 컨소시엄에 참여한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관계자 12명과 정부 관계자 1명 등 13명은 먼저 항공기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뒤 24일 철도 편으로 북한 나진항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범 운송은 서시베리아의 광산에서 생산된 유연탄 4만500t, 400만 달러 어치를 먼저 철도로 북한으로 옮긴 다음 나진항에서 이를 중국 선적 화물선에 실어 포항항으로 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임.

- 평안북도의 가을철국토관리사업 성과(의주군: 다리건설·도로 포장, 신의주: 3만5,000㎡ 토량처리, 광산군: 20km 제방 보강) 선전(11.17, 중앙통신)
- 국토환경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 11월 19일 정영남(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 부위원장/개막 발언)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1.19, 중앙통신·중앙방송)
-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시멘트 생산 성과(작년 대비 135.3%) 선전(11.19, 중앙방송)
- 국가과학원 물리학연구소, 금속의 내부에 생긴 균열이나 불순물 등을 판별하는 '휴대용 검사장치' 개발(11.19, 중앙통신)
-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냉난방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관로 굴착공사 진행(11.21, 중앙방송)
-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 지리정보체계(GIS) 기술을 응용하여 '전력망 관리지원 정보체계' 개발(11.22, 중앙통신)
- 北, 김정일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발표한 48건의 저작들이 수록된 '김정일 선집' 증보판 제24권 출판(11.22,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파리 유학 北대학생, 北 강제송환 과정서 탈출해 은신(11/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북한 엘리트 대학생이 자신을 강제송환하려던 북한 호송조에 공항으로 끌려가다 극적으로 탈출, 모처에서 은신 중이라고 19일 보도함.
 - 뉴스는 한씨가 최근 북한 당국의 '장성택 잔재 청산' 작업으로 숙청당한 인물의 아들이고, 북한 당국이 외국에서 무리하게 강제송환을 시도한 이유로 보인다면 파리에서 공부하는 북한 유학생을 북한기관 요원들이 사실상 '납치'해 강제소환하려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프랑스와 북한 간 외교 마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 북한, 재외공관·무역기관 특별사찰(11/21, 산케이신문)
 - 산케이 신문은 북한의 국외 간부와 접촉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재외공관이나 무역기관 등을 특별 사찰하고 있다고 21일 보도함.
 - 신문은 올해 7월 내려진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에 있는 대사관이나 무역기관 등에 노동당 조직지도부 과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파견돼 전격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전하며, 통상 해외에서 활동하는 간부를 감시하는 것은 '안전 대표'라고 불리는 각 공관에 배치된 보위부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처럼 조직지도부가 나서서 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보위부원의 부정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임.
- 북한, 사이버범죄 법제화 움직임...“사회적 위험행위”(9/14, 정치법률연구; 11/23,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23일 입수한 북한 학술지 '정치법률연구' 최신호(9월14일 발행)는 '컴퓨터망 범죄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사이버 범죄를 자세히 다룸.
 - 논문에 따르면 '컴퓨터망 범죄'는 "정보기술을 이용해 컴퓨터망 정보체계의 안정성을 파괴하거나 정상운영에 피해를 주는 형벌을 줄 정도의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라고 정의함.

- 그러나 "컴퓨터망 범죄의 개념은 공화국 형법에서 독립적으로 구분한 범죄의 유형이나 형태에 속하는 구체적 개념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현행법에 사이버 범죄가 명시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함.
- 논문은 "컴퓨터망 범죄의 범죄자로는 반드시 높은 기술을 가진 컴퓨터 전문가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감행하는 보통사람이 될 수 있으며 일정한 단체(법인도)도 될 수 있다"고 우려함.

마. 사회 동향

- 北, 고아원 보육교사 각별히 챙겨…평양 견학(11/17,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17일 김정은 黨 제1비서의 '배려'로 전국의 육아원·애육원 보육교사들이 '어머니날'(11월 16일)을 맞아 평양견학을 하고 있다며 관련 기사를 보도함.
 - 신문은 고아원 보육교사들이 금수산태양궁전, 만경대 김일성 생가, 평양시 육아원·애육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등을 참관하고 국립교향악단 공연을 관람했으며, 평양 견학에 나선 보육교사들에게는 어머니날인 16일 아침 여성회관에서 김 黨 제1비서의 선물전달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관련하여 "평양을 견학하는 각지 육아원·애육원의 보육원, 교양원, 종업원들은 자기들에게 각별한 정을 기울이며 치마저고리감 등을 안겨준 노동당에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고 17일 보도함.
- 北 'DIY 교육프로그램' 인기…놀이형 교재도 관심(11/1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8일 함경남도 함흥학생소년회관 '정보기술소조'가 올해 만화영화 주인공을 활용한 놀이형 교육 프로그램을 내놨으며, 함흥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교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프로그램에는 어린 학생들이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이 등장하는 등 유희 형식이 다양하다"며 "함흥 시내 40여개 소학교에서 이용되고 있고 전국 학교들에서도 도입 신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함.
 - 이어 신문은 평양 창덕학교에서 기본적인 자료만 입력하면 수업시간표,

성적관리 등 수업과 관계된 각종 자료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편리하게 수업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누구나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학교 측이 소스코드를 공개했다고 전함.

■ 이번엔 평양 38층 아파트 붕괴(11/19,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지난 10월 평양 낙랑구역에서 건설 중이던 38층 아파트가 부실 공사로 인해 일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도함.
- 북한의 한 소식통은 "지난 10월 중순, 평양시 락랑구역 일대에 건설 중이던 38층 아파트의 한쪽 부분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18층에서 작업하던 23살난 여성 돌격대원이 추락해 사망하는 등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19일 RFA에 밝힘.
- 사고 원인과 관련해 그는 "층수가 높아질수록 휘어져 올라가던 이 아파트는 천정에 설치해놓은 기중기(크레인)가 넘어지면서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 부분을 통째로 덮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함.

■ 북한 모유 수유율 28%...늘었지만 평균 미달(11/22, 미국의소리)

- 지난해 북한 산모들의 모유 수유율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보고서를 인용해 22일 보도함.
- 유니세프는 지난 20일 발표한 '2014 세계아동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 산모의 출산 직후 모유 수유율이 2012년(18%)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28%를 기록했다고 밝힘.
- 앤드루 브라운 유니세프 아시아사무소 대변인은 VOA에 "북한 산모들에게 출생 직후 1시간 이내 모유 수유를 하고 생후 6개월까지 모유만 먹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모유 수유는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함.

- 제18차 전국 체육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개막식, 11월 17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한광복(黨 부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1.17, 중앙통신·중앙방송)
- 엄윤철(56kg급)·려은희(女 69kg급) 등 역도 선수들의 '2014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善戰(금메달 12개, 국가별 순위 1위) 보도(11.17, 중앙통신)
- 중앙계급교양관에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유해·유물들(최근 발견된 유골 338구·유물 300여점 등)' 새로 전시(11.17, 중앙통신)
-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89.11.20) 25주년 즈음 '북한의 모든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는 미래중시, 아동중시 정책이 변함없이 실시되고 있다'며 '사회주의제도' 찬양(11.20, 중앙방송·노동신문)
- 北 위원회·성·중앙기관 일꾼 탁구경기(100여개 단체·남녀 선수 1,000여 명 참가), 11월 17일~20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11.20, 중앙통신)
- 홍국현(男 73kg급)·김설미(女 48kg급) 선수, '2014년 청도 그랜드상 유도경기대회(11.19~, 중국)' 금·동메달 획득(11.20, 중앙통신)
- 北 축구팀, '2015 동아시아컵'(중국, 2015년 8월 개최) 참가자격 획득 보도(11.20, 중앙통신·중앙방송)
- '어린이 건강의 날' 즈음 행사, 11월 21일 김형훈(보건성 부상, 北어린이후원협회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옥류아동병원에서 진행(11.21, 중앙통신)
- 北 설경선수(女, 78kg급), 2014년 청도 그랜드상 유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획득(11.21,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북, 영변 재처리시설 재가동 준비 가능성" <38노스> (11/20, 연합뉴스)
 -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건물과 남동쪽으로 접한 건물의 대형 냉각탑에서 증기가 관찰됐다"고 밝히며 북한이 영변 핵시설 중에서 핵연료의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을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지난 4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이같이 밝힌 38노스는 플루토늄 분리 시설을 포함한 재처리 관련 시설에서 "지난 여름부터는 거의 활동이 관찰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새로운 활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38노스는 새 위성사진에서 발견된 재처리시설에서의 증기가 "유지보수나 시험가동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재처리용 화학물질 제조 과정에서 생겼을 수도 있고, 따라서 본격적인 (재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첫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지만 영변의 5MW급 원자로가 여전히 정지된 것으로 파악되며, 지금까지 약 10주 동안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 정부 "北 핵실험시 국제사회 단호 대응 직면할 것" (11/20, 연합뉴스)
 - 정부는 20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위협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이어 "금번 유엔 총회 결의에 담긴 권고에 따라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하지 않도록 정부는 6자회담 당사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앞서 북한은 이날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시험(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력간섭, 무력침공 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했음.

■ 중국, 北 핵실험 위협에 "정세 완화해야" (11/20, 연합뉴스)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관련국들이 접촉 증진, 소통 강화, 정세 완화를 통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도움이 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홍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핵실험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가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북한 측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됨.
- 홍 대변인은 "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은 확고부동하고 명확하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3대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중국은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인권 분야의 갈등·이견을 처리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며 전날 발표했던 인권 문제에 관한 중국의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음.

■ 미국 "북한, 위협·도발로 아무것도 못얻어...고립만" (11/21, 연합뉴스)

-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20일(현지시간) "위협이나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만 더 심화될 것"이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제프 래스키 국무부 공보과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는 확고하다"며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는 국제사회의 합법적 요구에 핵실험 재개 위협으로 대응하는 것은 큰 우려를 자아낸다"고 강조했다.
- 북한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새로운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력간섭,

무력침공 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음.

■ "북한, 잠수함미사일 발사관 지상실험 실시" (11/22, 연합뉴스)

- 미국의 보수성향 매체 '워싱턴프리비컨'은 미국 정보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보 당국에서 북한이 지난달 말 함경남도 신포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지상 실험장에서 미사일 사출 실험이 실시됐음을 포착했다"고 21일(현지시간) 전했다며 관리들은 이 실험이 "발사 과정의 초기 단계"라면서도 북한이 "잠수함에서의 핵공격 능력 확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 SLBM을 발사할 때는 잠수함 안에서 미사일 엔진을 가동시키는 방법과 일단 물 밖으로 사출시키고서 가동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후자의 방법이 널리 쓰임.
- 미국 국방정보국 선임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틀 미국 안젤로 주립대학교 교수는 워싱턴프리비컨과의 인터뷰에서 "기술적 문제 때문에 북한이 실제로 SLBM을 배치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만약 누군가 외부에서 돕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 "北 핵전쟁 위협 강력규탄…단호대응 엄중 경고" (11/23, 연합뉴스)

-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이 오늘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유엔 북한 인권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우려와 엄중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유엔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전쟁 위협 등 도발적 언동을 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음.
-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수록 스스로의 고립만 심화시킬 것이며,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하며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에 담긴 권고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음.
- 이에 앞서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유엔 인권결의 배격과 미증유의 초강경대응전 진입을 주장하며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고 위협했음.

나. 미·북 관계

- 미국 국무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지지" (11/19,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8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넘기고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제프 래스키 국무부 공보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그동안 매년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처리를 후원하고 지지해 왔다"고 말했으며 특히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은 설득력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래스키 공보과장은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예상 반응을 묻자 "6자회담 당사국이자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국 정부가 얘기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음.

다. 중·북 관계

- 북한-중국, 국경교량 연결사업 속속 '재점화' (11/18, 연합뉴스)
 - 북한과 접경한 중국 지린성 정부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압록강변의 지린성 지안시와 북한 자강도 만포시를 연결하는 지안-만포 대교의 접속교량·도로 설계 입찰공고를 냈음.
 - 현재 지안-만포를 잇는 압록강 철교와 차량 통행용 다리가 있지만 너무 낡아서 화물 열차가 왕복 하루 한 번 운행하고 육로 통행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새로 놓은 국경교량과 자국 고속도로 및 지안 시내를 연결하는 길이 8.7km, 왕복 4차로 도로를 건설해 해당 지역의 대북교역 교통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임.
 - 현지 소식통들은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지방정부들이 내륙에 있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북한과의 교류 확대와 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내세워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 사업 승인을 받아내는 것으로 보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러·북 관계

- 北, 최룡해-푸틴 면담 보도...“양국 협력방안 논의” (11/19, 연합뉴스)
 -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으며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던 사실을 상기하며 "두 나라 사이의 호혜적인 협조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방도들을 적극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으며 최 비서가 "뜻깊은 다음해에 조(북)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시켜나갈 데 대해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 최 비서와 푸틴 대통령의 면담에는 북측에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노광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김형준 러시아 주재 대사가, 러시아 측에서는 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부 차관이 배석했음.
- 푸틴 "러시아-북한 협력 심화 지역안정에 기여" (11/20, 연합뉴스)
 - 러시아와 북한 간 정치·통상경제 협력 심화가 지역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강조했다.
 -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지난 8월 말 부임한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를 포함한 15개국 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은 뒤 환영사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의 정치 관계 및 통상 경제 협력의 심화는 두 나라 국민의 이익과 지역 안보·안정의 강화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 이는 러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과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며 러시아가 최근 들어 북한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고위급 인사 교류를 지속하고 있는데 대한

해명으로도 해석됨.

- 러시아 "푸틴 대통령, 김정은과 정상회담 준비돼 있어" (11/21, 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의 방문 문제 관련 질문에 러시아는 최고위급을 포함한 북한과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접촉을, 양측이 합의한 시기에 진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답했고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의사가 있다는 설명이었음.
 - 라브로프는 이어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도 논의됐다면서 "북한 측은 회담에서 2005년 9월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성명에 기초하여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으며 "러시아는 이 같은 북한 측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이 중요한 정치 과정을 재개하기 위한 합의를 찾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라브로프 장관은 "오늘 회담에서는 지난 18일 푸틴 대통령과 최룡해 특사 간 면담에서 이루어진 원칙적 합의들을 확인했다"면서 "최 특사가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를 표시했다"고 친서 내용을 언급했으며 "러-북 통상경제관계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에 러시아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 러시아 "북핵 개발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간주 않는다" (11/22, 연합뉴스)
 - 러시아의 6자회담 차석대표인 로그비노프 특임대사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핵비확산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아직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확산체제에 위협을 가하면서 지역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러-북 관계에 심각한 장애가 되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로그비노프는 낮은 기술적 수준 탓에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환경적, 기술적 재앙을 가져올 위험도 있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이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에 기초해 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의 핵 포기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로그비노프 대사는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취하는 군사적 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비대칭적 대응으로 러시아와 중국 등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서 차별적 요소가 없어야 한다"며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를 이행하고 제재에 벗어나면 평화적 원자력 이용과 우주 공간 이용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 기타

- 'ICC회부·책임자 처벌'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11/19, 연합뉴스)
 -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채택됐음.
 -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으며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임.
 - 이에 앞서 결의안에서 'ICC 회부' 표현을 빼자는 내용으로 쿠바가 제안한 수정안은 찬성 40표, 반대 77표, 기권 50표로 부결됐음.
- 커비 "중·러, 북한 인권문제 ICC 회부 지지 기대" (11/20, 연합뉴스)
 -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를 주도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지난 18일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만큼 안보리에서도 북한 인권문제의 ICC 회부 방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크다는 상황을 의식해서 커비 전 위원장이 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됨.
 - 커비 전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며 "지금부터는 안보리 이사국들 모두를 설득하는 일이 남았다"고 강조했다며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인권

유린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대해 유엔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중요한 조치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국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자동개입' 공식 확인 (11/17,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6일(현지 시간)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변인실 명의로 우리는 비상계획을 협의하지 않는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방위조약 의무를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이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음.
 -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월 주일미군 출동 문제를 일본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미국 내 지일파들이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점에서 나온 공식 입장이어서 주목되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일미군 기지가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로서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미국 국방부는 최근 주미 대사관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개와 관련한)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왔다고 워싱턴 소식통이 밝혔으며 이 소식통은 "기존 작전계획에 따라 일본과의 사전협의 없이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출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음.
- 백악관 "기림비 설치, 연방정부 관여 사안 아니다" (11/23, 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각 지역에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가 설치되는 것과 관련해 연방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지방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견해를 보였으며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분쟁에 대해서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음.
 -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인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계 네티즌의 주장과 소녀상을 보호하라는 한국계 네티즌의 요구가 맞서면서 각 입장에 동조하는 청원자 수가 각각 백악관

답변 요건인 10만 명을 넘었으며 백악관은 지방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을 보냈음.

- 미국 정부는 아울러 독도 분쟁과 관련해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는 중전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의하는 어떤 결론도 환영할 것"이라며 양국 간 해결을 강조했다.

나. 한·중 관계

■ 복지장관, 한중일 에볼라 공동 대응 논의 차 중국 방문 (11/22, 연합뉴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중국에서 열리는 제7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에볼라 공동대응을 위한 한중일 3국간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며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인플루엔자 유행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자 2007년 우리나라가 제안해 창설된 연례 협의체로 1, 4, 6차는 우리나라가 주관했으며 올해는 중국이 주관함.
- 이번 회의는 문 장관을 비롯해 중국의 리빈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주임, 일본의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 신영수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이종현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등이 참석함.
- 복지부는 "올해 회의는 세계적으로 보건 위기를 불러일으킨 에볼라 대응방안과 글로벌 보건 이슈로 부각된 만성질환, 보편적 의료보장 등에 대한 3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정부, 中에 '남·북·중 협력' 추진 제안 (11/23, 연합뉴스)

-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1일 "이번에 중국에 가서 외교장관 회담 과정에서 중국과 남북중도 해보자는 얘기도 했다"면서 "지금 당장은 북중 관계도 어렵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 조기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남북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양자 외교도 중요하지만 소(小)다자도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3자(협의)가 굴러가면 이것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게 된다. 큰 원과 작은 원이 상호 추동해서 서로 보완하는 어프로치를 우리가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와 관련, 외교부는 23일 "우리측은 동북아 역내 소다자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남북러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남북중간에도 여사한(이같은) 협력을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중국측에 전달한 바는 있으나 남북중 외교장관 회담을 제안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 **한중일 FTA 속도내나...6차 협상 24~28일 일본서 개최 (11/23, 연합뉴스)**

- 한중일 FTA 6차 실무협상이 24일부터 5일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밝혔으며 한국에서는 김영무 산업부 FTA교섭관이 수석대표로 협상단을 이끌고 참석한다. 중국에서는 쑨위엔장 상무부 국제사 부국장이, 일본에서는 타쇼 사토 외무성 경제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설 것임.
- 3국은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품 양허 협상지침과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고 별도로 수석대표 협상도 열릴 것이며 이는 수석대표들이 협상의 큰 틀을 잡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찾아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임.
- 3국은 2012년 11월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5차례 협상을 벌였으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아래에 상품,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등 다양한 규범과 협력 분야를 논의했지만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임.

다. 한·일 관계

■ **아베, 군 위안부 문제에 "일본 명예회복" 주장 (11/20,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20일 보도된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요시다 세이지 증언이 해외에 널리 선전된 결과 일본의 명예가 크게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는 동시에 요시다 증언이 잘못됐다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전략적인 외교 메시지를 더욱 활발하게 내보내겠다"고 밝혔다.
-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회복이나 사과·배상보다 '일본의 명예 실추'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현재의 태도를 고수함에 따라 재집권할 경우 역사 문제로 국제사회와 갈등을 반복할 것으로 보임.

- 아베 총리는 최근 국제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서 박대통령과 솔직한 대화를 했다고 자평하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흥금을 털어놓고 회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라. 한·러 관계

- 러시아, 우리 측에 '푸틴·최룡해 면담' 설명 (11/19, 연합뉴스)
 -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면담과 관련, 우리측에 1차 사후설명(디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는 우리측에 1시간가량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만남이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최룡해가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했다는 것도 알린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면담 내용까지 소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북러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 러시아 정부는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모스크바의 싱크탱크 등에서는 북핵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 등이 없는 한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바로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주한 러시아대사에 티모닌 북한주재 대사 내정 (11/20, 연합뉴스)
 - 차기 주한 러시아 대사에 알렉산드르 티모닌(62) 북한주재 러시아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북한주재 대사로 부임하기 전 러시아 외교부에서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담당 특명 대사로 수개월 일했고 그전에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했음.
 - 러시아는 남북한 모두와 수교관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 외교부 내 한반도 담당 인사들은 남북한을 오가면서 교차 근무하고 있음.
 - 서울의 한 소식통은 "티모닌 대사의 경우 북한보다 한국에서의 근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면서 "부임시 한반도 관련 사항에 대해 균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우리 정부 내에서는 티모닌 대사의 이력을 고려할 때 남북러 3각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음.

마. 미·중 관계

- 중국, 북한 접경서 한국계 미국선교사 정식 체포 (11/21, 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북한 접경에서 기독교 선교활동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지난 18일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투먼에서 횡령과 송장 위조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 피터 한(74)을 정식으로 체포했다고 그의 변호인이 20일(현지시간) 밝혔으며 투먼 경찰은 피터 한의 구금과 관련한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음.
 - 피터 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투먼에 거주하면서 탈북자 지원을 위한 기독교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펼쳤고, 2002년에는 현지 조선족 청소년을 상대로 한 직업학교, 빵 공장 등을 세웠음.
 - 지난 8월 중국 당국은 랴오닝성 단둥에서 카피 가게를 운영하면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온 캐나다 국적의 케빈과 줄리아 돈 개럿 부부를 강제로 가뒀으며 현재 개럿 부부는 변호인과 접촉까지 금지된 상태로 구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미국 NSA 국장 '해킹' 발언에 '발끈' (11/22, 연합뉴스)
 - 마이클 로저스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 겸 미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 "중국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의 전력망 가동을 중단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2일 1면 머리기사에서 로저스 국장의 발언을 비중 있게 소개하면서 중국의 전문가를 동원해 "미국 스스로의 조작"이라고 비판했으며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인터넷 공격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라면서 "중국 관계당국의 통계를 보면 중국에 대한 인터넷 공격 중 많은 부분이 미국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음.
 - 홍 대변인은 중국 법률이 해커 공격 등 인터넷 안전 파괴 행위를 금지하고 정부도 이 같은 범죄행위 척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과 비난을 중단하고 인터넷 공간의 평화 안전 수호에 더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 미·일 관계

- 일본, 미국 고교 교과서 '위안부 강제연행' 기술 수정요구 (11/18,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미국 공립 고등학교 교과서에 담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다고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혔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등의 공립 고교에서 사용 중인 세계사 교과서에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서술이 담겨 있어 뉴욕의 일본 총영사관이 출판사 측에 내용의 수정을 요청했음.
 - 군 위안부 관련 내용이 담긴 교과서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출판사 맥그로힐이 펴낸 '전통과 교류'라는 책이며 '일본군이 14~20세의 여성 약 20만 명을 위안소에서 일 시키기 위해 강제로 모집·징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외무성은 이 교과서가 지도에 "일본해(동해)"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했음.

사. 미·러 관계

- 푸틴 "미국, 러시아 굴복 시도 성공 못해" (11/19,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친정부 단체들과의 만남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모욕하려 한다'는 한 참가자의 언급에 대해 "미국은 우리를 모욕하려는 게 아니라 굴복시켜 지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음.
 - 또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희생을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상 러시아를 굴복시키려 했다가 성공한 이는 아무도 없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푸틴 대통령은 또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제재를 내렸지만, 그 결과는 제재를 주도한 세력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아무도 세계의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현재 서방국가들 사이의 긴장이 곧 누그러질 것이라고 내다봤음.

아. 중·일 관계

- 중일 관광장관,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 추진 합의 (11/17, 연합뉴스)
 - 오타 아키히로 일본 국토교통상이 16일 중국 상하이로 방문해 리진짜오 중국 국가여유국장과 회담했으며 한국·중국·일본 3국 관광장관 회의를 조기에 개최하는 방침을 서로 확인했다고 동행한 기자들에게 밝혔다.
 - 아키히로 국토교통상은 또 리 국장이 일본을 방문한다는 것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중·일 정상회담 직후에 양국 관광 정책의 수장끼리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한·중·일 3국은 2006년부터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매년 관광 담당 장관 회의를 열었으나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 직후인 2012년 11월 회의가 중국의 불참 통보로 무산되고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음.

- 일본, 아세안과 첫 국방장관 회의...“중국 견제용” (11/20, 연합뉴스)
 - 일본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과 처음으로 국방장관 회의를 열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의 파간에서 에토 아키노리 일본 방위상 겸 안전보장법제담당상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방위 각료가 참가한 가운데 19일 비공식 회의가 열렸음.
 - 이들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일본과 아세안 국가 사이에 방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에토 방위상은 항해의 자유나 예상치 못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중국의 해양 진출 정책을 우회적으로 견제했음.
 - 일본이 아세안 국가와 방위 교류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고 자위대의 활동을 확대하는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중국, 일본에 영토주권 훼손행위 중단 촉구 (11/23, 연합뉴스)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중국은 일본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가 자국 영토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데 대해 "일본은 중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음.
 - 홍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의 고유영토로 중국은 반박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으며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중국정부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우리는 일본이 중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특히 중일 양국이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에 앞서 달성한 '관계개선 4대 원칙'에 대해서도 "실제적 행동으로 수호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으며 이 같은 중국의 반응은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따른 것임.

자.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 유엔 상대로 북한인권 관련 '거짓말과 진실' DVD 만들어 배포(11/17, 국민일보)
 - 북한이 지난 10월 유엔 무대를 상대로 자국 입장을 담은 DVD를 배포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음.
 - 17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북한 유엔대표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자국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배포할 당시 '거짓말과 진실'이라는 제목의 DVD도 함께 배부했음.
 - 신문은 약 18분 분량의 이 DVD가 조선어로 제작됐지만 영어 자막이 함께 들어 있으며, 영어 자막의 서두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악의 세력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유치한 계략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 DVD는 주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지적했던 탈북자 신동혁(33) 씨에 대해 신 씨가 수용소에서 생활한 적 없다는 등 그의 증언을 부정하는 내용임.
- 유엔 '북한, 10대 여성 출산율 세계 최저'(11/18, 미국의 소리)
 - 유엔 산하 유엔인구기금 (UNFPA)은 18일 발표한 '2014 세계 인구 보고서' (State of World Population 2014)에서 지난 1999년에서 2012년 사이 북한의 15살에서 19살 여성 출산율은 1천 명 당 1명으로, 전 세계에서 북한의 10대 여성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밝힘.
 - 북한의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연평균 출산율은 여성 1명 당 2 명으로, 전 세계 202개 나라 중 67번째로 낮았으며, 이는 현재의 인구 구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구대체 출산율 (replacement rate)인 2.1명에도 못 미쳐,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북한의 10살에서 24살 사이 인구 비중은 전체의 23%로, 세계 평균 25%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어 젊은 층의 비중이 적은 것으로 추정됨.
 - 북한에서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태어난 여아의 '기대수명'은 73세로, 전 세계 평균 기대수명 72세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 반면 남아의 기대수명은 66세로 전 세계 평균 68세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의 산모사망률은 (2014년 출산 기준) 출생 10만 명 당 87명으로 세계 평균

210명보다 크게 낮았지만 한국의 27명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높았음.

- 북한 최명남 "인권소동, 핵실험 자제할 수 없게 해"(11/19, 연합뉴스)
 -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해 북한 대표들은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분노를 표출했음.
 -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부국장과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김 성 참사관 등 북한 대표들은 1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3위원회 회의가 오후에 속개되기 10여 분 전에 자리에 앉는 등 어느 때보다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고, 결의안이 통과되자 채택을 주도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리고 미국 등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음.
 - 결의안 통과 이후 발언권을 얻은 최 부국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말했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오후 최 부국장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전면 배격했다며 그의 발언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이번 결의를 발기한 EU와 일본 뒤에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있다고 비난했음.
 - 또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포악무도한 반공화국 인권 소동은 우리로 하여금 핵실험(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 최 부국장은 "유엔의 해당 대표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진실을 요해·과약할 수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임.
 - 또한 "'결의' 강행채택은 EU와의 인권대화는 더는 필요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스타브로스 람브리니스 EU 인권특별대표의 방북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 뜻을 드러냈으며, EU와 일본을 향해 인권대화는 물론 정치대화를 포함한 각종 대화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다고 비판했음.
- 北 신문, 연일 美 역사 거론하며 '인권 역공'(11/19,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을 겨냥한 '세계 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유린의 왕초'라는 제목의 코너를 마련하고 연일 미국의 역사를 거론하며 미국을 태생적인 '인권유린국가'로 비난하고 있음.

- 이달 6일에는 '셔먼호는 국권유린을 목적인 침략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대동강 하구에 나타나 약탈과 살육을 벌인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이 민족의 역사에서도 '국권'과 '인권'을 유린한 국가였다고 주장했다.
 - 9일에는 '독립선언이 규제한 권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 규정된 인권이 사실상 '백인 농장주들과 부르주아'만을 위한 것이었다며 그 '반동성'을 문제 삼았다.
 - 19일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흑인 노예해방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발표한 노예해방선언이 흑인 노예의 해방보다는 흑인을 징집해 북부 군대를 강화하고 남부 흑인 노예들의 도주와 봉기를 불러일으켜 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후에도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북한 "대북전단은 인권모략...남북관계 위해 중단해야"(11/20,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변함없는 대결정책과 인권모략의 산물'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반복 '인권모략 소동'의 한 고리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전단 살포를 포함한 '적대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빠라 살포 행위는 괴뢰 패당이 감행하고 있는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의 한 고리"라며 "현 괴뢰 집권세력이 정권의 자리에 오른 첫 시기부터 집요하게 벌이고 있는 것이 반공화국 핵 소동과 함께 인권모략 책동이라는 것은 널리 폭로된 사실"이라고 비난했다.
 - 또한 "미국의 인권 소동에 편승해 북 인권법 조작과 유엔 북 인권사무소 설치 놀음에 미쳐 날뛰면서 조국과 인민의 버림을 받은 인간쓰레기들까지 내세워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있는 것이 바로 괴뢰 패당"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 "UN 인권결의안 배경...전쟁억제력 강화할 것"(11/20,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의 통과를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전쟁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성명은 결의를 전면 배격하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시험(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력간섭,

무력침공 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했음.

- 또한 북측이 인권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협력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미국 등이 이를 거부해 "인권대화는 물론 대화 일반과 교류협력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다"고 밝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협력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음.

■ 유엔인권결의안에 반발 ... 북 연이틀 핵실험 위협(11/21, 중앙일보)

-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하자 북한이 핵실험 위협 수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영변 핵 시설에서 이상징후가 감지되었음.
-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의 방사화학실험실을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음.
- 38노스는 지난 4일 촬영한 위성 사진을 토대로 "방사화학실험실과 연결된 건물의 대형 냉각탑에서 증기가 관찰됐다"며 "유지 보수나 시험 가동에 따른 것일 수 있으나 재처리용 화학물질 제조 과정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첫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음.
- 또 "사진에 등장하는 트럭은 (핵실험을 위한) 사용후 연료봉을 옮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핵 시설 내 건물 외부에 쌓인 회색 물질들은 5MW급 원자로 연료봉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북한 "미국이 인권결의안 강압...제한없이 대책 강구"(11/22, 연합뉴스)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2일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미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비난하며 모든 대책을 동원해 이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힘.
- 논평은 북한인권결의안에 표결에 참여한 국가 중 상당수가 경제원조를 중단하겠다는 미국과 일본의 '위협' 탓에 찬성했다고 주장하고 "공정성이 완전히 무시되고 돈을 걸고 벌어지는 정치적 협잡놀이"이라고 비난했음.
- 이어 미국이 인권 문제 지적에 앞장선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상을 깎아내리려는 것이라며 "이제 핵 문제와 인권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불시에 군사적 도발을 걸어오게 되리라는 것은 더 두고 볼 필요 없게 됐다"고 강조함.
- 노동신문도 이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라는 제목 아래 4개의 논평·논설 등을 싣고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거듭 비난했음.

- 북한 "남한 '유엔 인권결의' 추동질...전면 선전포고"(11/22, 연합뉴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2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남한이 미국을 도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추동했다며 남측을 비난했음.
 - 조평통은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나선 남측이 탈북자를 동원해 결의안 통과에 앞장섰고 "허위와 날조, 모략으로 꾸며낸 자료로 인권결의 조작을 극구 추동질했다"고 비난함.
 - 특히 남측에서 진행 중인 북한인권법 처리, 북한 인권사무소 설치 등의 논의를 '광란 소동'이라고 비난하며 남측을 '국제적인 반공화국 인권 모략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유니세프 '북한 모유 수유 55% 증가'(11/22, 미국의 소리)
 - 유니세프는 20일 '2014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5)'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산모 1백 여여 중 28명이 출산 직후 모유 수유를 하여 전년에 비해 55% 이상 증가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1천 명 당 27명으로 전 세계 195개 나라 가운데 79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수치는 전세계 평균인 1천 명 당 46명 보다 크게 낮음.
 - 북한에서 여성 한 명이 임신과 출산으로 사망할 위험성을 계산한 산모 사망율은 2013년 현재 630명 당 1명으로 나타나 2012년 670명 당 1명 사망에 비해 다소 증가했음.

- 북한 국방위 "인권결의 배격... 초강경대응전 진입"(11/23, 연합뉴스)
 - 북한 국방위원회는 23일 성명에서 유엔에서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우리 국권을 해치려는 가장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거론하며 결의안을 전면 거부, 배격하고 초강경대응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음.

- 국방위는 특히 북한 억류 미국인들의 억류 해제를 언급하며 북한이 "인도적인 관용"을 베풀어주었으나 "미국은 대조선 인권소동에 광분하는 것으로 응수했으며 그로 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세례를 받을 첫 과녁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함.
- 이어 미국에 사죄를 촉구하고, 일본, EU, 한국 정부에도 경고하며 유엔도 공정한 입장을 취할 것을 주장했음.
- 또한 1993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거론하며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고 반문했음.
- 국방위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투표를 한 러시아와 중국 등을 지칭, "의롭고 대 바른 여러 나라가 미국 주도하의 대조선 인권소동에 반기를 들고 사태 수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였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2. 북한 인권

- 클래퍼 "북한 관리들, 만찬때 인권 개입말라 비판"(11/17, 연합뉴스)
 -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6일(현지시간) 오전 방영된 미국 CBS방송 시사대담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방북 당시 북한 관리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비판했다고 소개했음.
 - 클래퍼 국장은 "방북 기간 북한 관리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간단한 대화가 있었다"며 "그러나 북한 관리들의 많은 발언 속에는 일종의 '제도적 편집증'(institutional paranoia)이 있었다"고 지적했음.
 - 그는 "일례로 북한 관리들은 한·미 합동훈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일정시점에 가서는 북한인권문제를 꺼내 들었다"며 "미국이 개입주의적 접근 기조에 따라 자신들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말했음.
 - 클래퍼 국장은 "북한 관리들은 자신과의 대화에서 북미 관계의 돌파구가 나오지 않아 실망했다"며 "그들은 스스로 북한이 포위됐다고 느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음.

- 'ICC 회부' 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수정안 부결(11/19, 연합뉴스)
 -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18일(현지시간) 쿠바가 제안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표현을 뺀 북한인권결의안 수정안이 표결 결과 찬성 40, 반대 77, 기권 50으로 부결되었음.
 - 수정안은 즉 북한에서 반인권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북한인권 상황의 ICC회부 및 책임자 제재 권고를 제외했음.

- 유엔, 북한인권상황 ICC회부·책임자 처벌 권고(11/19, 연합뉴스)
 -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킴.
 - 이에 따라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를 남겨두었음.
 - 이번 결의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음.
 - 특히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 넘기고 안보리는 COI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인권 상황을 ICC 회부하는 한편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결의안 표결에서 중국과 쿠바,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은 반대표를 던짐.
 - 유엔은 이 결의안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됨.
 -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오준 대사는 결의안 통과로 향후 유엔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논의될 것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며 "결의안이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가 COI의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든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음.

- 정부 "유엔결의안 채택 환영...北 구체적 조치 기대"(11/19, 연합뉴스)
 - 정부는 19일 외교부 당국자 명의의 논평을 통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함.
 - 정부는 "북한이 이번 결의의 권고를 수용하여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음.

-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관련 결의를 지지해 왔으며 이번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면서 "정부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나가고자 하겠다"고 밝혔다.
 -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연합(EU) 등이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역대 최다인 6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 興 "北인권법 처리로 국제사회 외침 응답해야"(11/19, 연합뉴스)
- 새누리당은 19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음.
 - 박대출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가결을 환영한다"면서 "이제 국회가 북한인권법 처리로 국제사회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박 대변인은 다른 내용의 북한인권법 입법을 추진 중인 야당에 대해 "법에 '민생'을 슬쩍 끼워넣어 몰타기 하거나 지연하려고 시도하지 않기 바란다"면서 "북한인권법의 연내 처리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음.
 - 당 북한인권·탈북·납북자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언급, "아버지가 지은 원죄를 김 위원장이 직접 푸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직접 나서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인권 탄압을 중단하는 등 결의안의 권고를 따르면 ICC 회부 중단운동을 벌이고 정치범수용소 터의 재개발을 국제사회가 나서 도와줄 수 있도록 힘써보겠다고 말했음.
- 野 "남북 간 화해·긴장완화가 북한인권 해법"(11/19, 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 노력과 함께 남북화해를 주문했다.
 - 한정애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음.

- 한 대변인은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인권과 평화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새정치연합은 남북화해와 긴장완화가 북한인권의 해법이라는 점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 미국 국무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지지"(11/19,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8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제프 래스키 국무부 공보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그동안 매년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처리를 후원하고 지지해 왔다"고 말하며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와 더불어 북한인권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강조했다.
 - 래스키 공보과장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예상 반응을 묻자 "6자회담 당사국이자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국 정부가 얘기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 중국,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반대(11/19, 연합뉴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는 "중국은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국제 인권문제에서의 갈등·이견을 처리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면서 "우리는 인권문제의 정치화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 이어 "인권문제가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되는 데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 홍 대변인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토론하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안보리, 북 인권 ICC 회부해야"(11/19,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과 유럽 등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할 것을 사상 최초로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지난 18일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것을 일제히 환영했음.
 -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유엔 총회가 인정한 것이며,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해야 한다는 보고서 권고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을 촉구했음.
 - 국제인권연맹(FIDH)의 미셸 키센카터(Michelle Kissenkoetter) 아시아담당국장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지적함.
 - 세계기독교연대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팀장은 북한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이라는 어려운 숙제가 아직 남아있지만, 수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북한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음.
 - 스위스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유엔워치(UN Watch)의 레온 셸티엘(Leon Saltiel) 부국장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 정권의 돈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인권단체 링크(LiNK)는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을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북한인권유린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음.
- 정부 "北 핵실험시 국제사회 단호 대응 직면할 것"(11/20, 연합뉴스)
 - 한국 정부는 20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위협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음.
 - 이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을 약속했음.
 -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를 묻는 질문에 "핵실험과 관련한 임박한 징후가 없더라도 북한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함.

-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준비는 상시 한다고 평가하지만 가까운 시일내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함.
- 서방국들 "유엔 북한인권결의, 국제사회의 중대한 요구"(11/20, 미국의 소리)
 - 유럽연합(EU)은 18일 결의안 통과 후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총회가 행동을 취한 데 환영하며 가해자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영국 외무부도 성명에서 결의안 통과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조직적으로 만연된 인권 탄압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중요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음.
 - 휴고 스와이어 외무부 부장관은 북한인권 상황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 필요성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북한 정부가 인권 상황에 관해 국제사회와 대화하고 접촉할 수 있는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음.
 - 특히 북한 정부가 유엔 인권기구의 기술적 자문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초청 의지를 내비친 점을 지적하며, 북한 정부가 인권 개선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제사회는 긍정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말함.
- 러시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역효과 낼 것"(11/20, 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를 만난 뒤 러시아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 위원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비판했음.
 - 라브로프 장관은 만일 목적이 모든 나라가 의무를 이행하게 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면 적절한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음.
- 영국 의회서 북 인권개선 방안 논의(11/20,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APPG North Korea)는 지난 19일 북한과의 문화 교류 등 이른바 '소프트 파워'를 이용한 대북 개입 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등을 진단하는 토론회(Soft Power and Cultural Diplomacy with North Korea)를 개최했음.

- 주최측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보다는 건설적인 교류를 택하는 것이 자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국 등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는 몇몇 국가들이 시행해 온 개입 정책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오갔음.
- "이젠 국회가 북한인권법 통과시켜야"(11/2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등 북한인권 관련 21개 단체는 20일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환영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15년 여간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일해 온 NGO(비정부기구)들이 노력한 결실이 맺어진 것"을 자축했음.
 - 참석자들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 반대가 예상되고 있어 이 사안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힘들다는 전망이 이어지는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이 인권 범죄자라는 인식을 국제사회가 갖게 됐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음.
 -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은 "과거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 북한 인권 운동은 책임자를 규명하고 처벌하는 단계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면서 "이는 북한 인권 운동의 또 다른 시작점"이라고 평가했음.
- 김무성 "이번 국회서 북한인권법 반드시 통과해야"(11/20, 연합뉴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함.
 - 김 대표는 북한인권법이 10년째 국회에서 계류중임을 들며 "여야 합의가 안돼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음.
 - 특히 "일부에서는 우리 새누리당의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다고 하는 비판도 있는데 이는 국회 구조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서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 국회"라며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하는 책임을 야당에 돌렸음.

- 문희상 "집권당이 국회 권위 떨어뜨리고 정치 훼손"(11/21, 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비대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인권은 인류의 보편가치이고, 111개국이 결의했음에도 북한은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전면 배격한다고 했다"며 어불성설이라고 강력 비판했음.
 - 그는 "더구나 새로운 핵실험으로 전쟁억제력을 강화할 거란 얼토당토 않은 협박을 해 북이 인권개선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며 "북은 지금이라도 인권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만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이번 계기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나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북의 인권보다 대북전단살포와 기획탈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북한인권법은 실질적 인권 향상을 위해 제대로 제정돼야 하고, 그 해답은 지난 4월28일 발의된 우리당의 북한인권증진법안에 있다"고 밝힘.

- 미국 "북한, 위협·도발로 아무것도 못 얻어…고립만"(11/21, 연합뉴스)
 -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위협이나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만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함.
 - 그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분석이나 평가 등을 묻는 말에는 '정보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음.
 - 제프 래스키 국무부 공보과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는 확고하다"며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는 국제사회의 합법적 요구에 핵실험 재개 위협으로 대응하는 것은 큰 우려를 자아낸다"고 강조했다.
 - 그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부연했음.

- 각국 북한인권 비판…"주민 편 서서 억압정권에 맞설 것"(11/21, 미국의 소리)
 - 유럽 여러 나라가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음.

- 체코 외무부는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키로 한 유엔 결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며,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음.
 -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해 효과적인 조사, 검증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폴란드 역시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결과를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 독일 정부는 유엔 결의안 채택의 상징성을 지적하면서 북한 지도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유엔 안보리에 달렸지만, 이번 결정에 담긴 국제사회의 신호가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았음.
 -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도록 한 유엔 결의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해 왔으며, 스위스, 스웨덴 등도 북한의 인권 문제만큼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음.
 - 캐나다 외무부는 북한의 극도로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강한 어조로 거듭 비난하며,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음.
- 국회 내주 北인권법 논의 착수...연내처리 주목(11/21,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외통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이 그간 개별적으로 발의해 온 북한인권법을 일괄 상징키로 여야 간사간 합의했음.
 - 이에 앞서 새누리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이날 별도 회동을 하고 그간 여당에서 각각 개별발의한 5개의 북한인권법을 합쳐 별도의 통합안을 발의할 방침으로, 법무부 산하에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임.
 - 새누리당의 통합안에는 북한주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의무도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여야 쟁점 사항인 북한 인권재단은 구성하되 야당 입장을 감안해 인도적 지원활동을 겸하도록 할 방침임.
 -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다음주에 외통위에 북한인권법을

상정하기로 간사간 합의를 마쳤다"고 밝힘.

-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야당은 이미 지난 4월 태스크포스 차원에서 북한인권증진법을 마련한 상황"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나 탈북기획을 지원하는 것을 인권법이라 할 수는 없는 만큼 실제 나온 새누리당안을 봐야 처리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

3. 탈북자

- 19일 고양시 탈북자 취업박람회(11/17, 자유아시아방송)
 - 통일부가 주최하는 '2014 탈북자 취업박람회'가 오는 19일 개최됨.
 - 통일부는 17일 진행된 정례회견에서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취업박람회가 마련됐다"며 "구인을 원하는 이 지역 기업과 취업지원센터 상담사를 연계한 지원을 통해 탈북자들의 취업을 돕겠다"고 밝혔음.
 -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취업상담사가 얼마나 열성을 갖고 구직자를 상담하고 구인기업과 연결시키느냐에 따라 탈북자의 취업률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 통일부는 탈북자들의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전국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에는 대규모 취업박람회 대신 남북하나재단이 지역별 소규모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함.
- "영 영화사, 탈북자 주연 北인권 영화 제작"(11/18, 연합뉴스)
 - 영국 영화제작사 '스퀘어 아이드 픽처스(Square Eyed Pictures)'는 '그들이 보는 동안(While they watched)'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인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 중이라고 밝혔음.
 - 북한 체제의 붕괴를 가정한 미래의 시점에서 오늘날의 북한을 회고하는 설정으로 구성된 이 영화에는 지난달 말 영국 의회에서 북한인권 실상을 언해 주목받은 탈북 여대생 박연미(21) 씨가 주연으로 등장함.
 - 제작사 측은 다음달 제작을 마무리하고 공개할 예정인 이 영화를 통해 '북한에서 일어나는 온갖 잔인한 행위를 왜 더욱 결단력 있게 막지 못했나'와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립서울병원, 탈북자 전문 진료소 개설(11/18, 자유아시아방송)**
 - 국립서울병원은 탈북자의 정신건강을 전문으로 다루는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클리닉'을 오는 25일 개소할 예정이며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최근까지 탈북자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던 전진용 선생이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 탈북자를 위한 진료는 매주 화요일마다 실시할 예정이며, 보다 편안한 병원 이용을 위해 북한 출신 간호사 2명을 임용할 예정이다.
 - 전진용 선생은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2만7천여 명 중 상당수는 우울과 불안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검진을 받을 기회는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기간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 전진용 선생은 하나원 내 의료시설인 하나의원에서 5년 3개월간 탈북자들의 정신건강을 돌보다 지난 달 1일부터 국립서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음.

- **파리 유학 北대학생, 北 강제송환 과정에서 탈출해 은신(11/19, 연합뉴스)**
 - 프랑스 정부 초청으로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북한 엘리트 대학생 한모 씨가 자신을 강제송환하려던 북한 호송조에 공항으로 끌려가다 극적으로 탈출, 모처에서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프랑스 경찰과 한모 씨가 다니는 국립 파리 라빌레트 건축학교(E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chitecture de Paris-La Villette)측도 이 사안을 인지, 한 씨의 소재를 파악 중임.
 - 한 씨는 특히 최근 북한 당국의 '장성택 잔재 청산' 작업으로 숙청당한 인물의 아들로, 북한 당국이 외국에서 무리하게 강제송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임.
 - 파리에서 공부하는 북한 유학생을 북한기관 요원들이 사실상 '납치'해 강제소환하려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프랑스와 북한 간 외교 마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한 씨를 강제송환하려던 북한 호송조는 프랑스와 접경한 제3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알려져, 이 제3국과 북한 간 외교 마찰도 예상할 수 있음.
 - 라빌레트 건축학교 카롤린 르쿠르투아 부학장은 18일(현지시간) "학교 측에서 학생과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씨의 소재를 알아봤으나 최소한 15일 이상 그를 본 사람이 없다"며 "현재 프랑스 경찰이 한 씨의 소재를 확인 중"이라고 전함.

- 한 씨는 북한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가 숙청당하고 나머지 가족과 친지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것을 알고, 송환되면 자신도 함께 처형될 위험을 느끼고 탈출에 성공해 현재 지인의 도움을 얻어 모처에 숨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탈북자 동향 수집 40대 탈북女에 징역 4년 구형(11/19, 연합뉴스)**
 -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내 거주 탈북자 정보를 수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로 구속 기소된 탈북 여성 김모(45) 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함.
 - 검찰은 구형 사유로, "북한과 접촉한 점은 현행 법을 어긴 것이지만 본인이 자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힘.
 - 김 씨는 지난 2011년 한국 입국 후 북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 재입북하기 위해 이듬해 8월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전화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측의 요청을 받고 탈북자 20여명의 신상정보 등을 휴대전화로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음.
 - 그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재입북을 시도하려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2013년 11월 경찰에 자수했음.
- **하태경 "러시아, 탈북자 강제 복송 않을것"(11/21, 연합뉴스)**
 - 새누리당 북한인권·탈북·납북자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1일 주한러시아 대사관이 자신의 질의서에 탈북자의 강제 복송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음.
 - 하 의원에 따르면 주한러시아 대사관 측은 "북한난민이 러시아 영토로부터 북한으로 송환된 사례는 과거 수년간 없었다"면서 "북한주민이 제3국행을 희망할 시에는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에 대한 존중에 입각해 유엔난민최고대표(UNHCR)의 절차에 따르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 주한러시아 대사관 측은 지난 9월 북·러가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데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은 외국인의 입·출국 및 체류에 관한 해당국의 법규를 위반한 개인의 입국승인(admission)과 이동(transfer)을 다루는 것으로 협정 체결일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음.

4. 이산가족

- 랭글 의원 "이산상봉안 내달 채택 목표"(11/17, 자유아시아방송)
 - Reunion of divided Korean American families를 제출한 찰스 랭글 하원 의원의 대변인은 미국 의회의 올해 회기를 넘기지 않고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랭글 의원 측은 이를 위해 17일 의회에서 이산가족을 주제로 한 기록영화 상영회를 주최할 예정임.
 - 미국의 한인 이산가족들도 오랜만에 미국 정치권에서 이산가족상봉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환영한다면서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결의안의 지지를 촉구하는 편지 보내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음.
 - '한인 이산가족 상봉촉구결의안'은 이산가족 중 일부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남북한 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간간히 열리고 있음에도 한국계 미국인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5. 납북자

- 납북 귀국자 지원법 개정안 일 의회 통과(11/19, 자유아시아방송)
 - 납북피해자가 일본으로 귀국했을 때를 대비해 마련된 납치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이 일본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 본회의에서 19일 만장일치로 통과됨.
- 일본서 납북 메구미 귀국기원 집회(11/1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 납치된 지 37년째를 맞은 요코타 메구미 씨의 조속한 귀국을 기원하는 집회가 지난 14일 일본에서 개최되었음.
 - 같은 날, 야마타니 납치문제 담당대신은 기자회견에서 '메구미 씨 납치 37년'에 대해 "길고 참혹한 37년의 세월이 흘렀다. 메구미 씨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음.
 - 또한 납치자 조사보고서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현재 북한에 대한 조치는 정부 내에서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납치 가족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고, 현재 일본 내의 의회 해산과 선거 등으로 인해

납치문제 해결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통일부-WFP, 대북 인도지원 협력 MOU 체결(11/18, 연합뉴스)
 - 통일부와 세계식량계획(WFP)은 1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북한의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지원 사업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이 당국자는 "이는 북한 영양지원 사업에 대해 양 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MOU의 주요 내용은 양자 간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결과 공유 등"이라고 밝혔다.
- 한국, WHO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630만 달러 지원(11/18, 미국의 소리)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가 17일 발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난 10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630만 달러(한화 69억8천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음.
 - 지원금은 북한 산모와 영유아 대상 의료시설 개선과 의약품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임.
- WFP "내년 3월까지 대북지원 안정"(11/19,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한국이 영양지원사업에 미화 700만 달러 기부를 약속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 3월까지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110만 명에 영양지원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었다고 전함.

- 그러나 프랜시스 케네디 세계식량계획 본부 대변인은 대북식량지원 기한인 내년 6월 말까지 지원이 계획대로 이루어려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110만여 명에게 2천580톤의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해 지난 6월에 비해 수혜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함.
- 영국 NGO, 황해남도에 6번째 빵 공장 건립(11/19, 미국의 소리)
 - 영국의 대북 지원단체인 '북녘어린이사랑 (Love North Korea Children)'이 황해남도 과일군에 6번째 빵 공장을 건설함.
 - 제빵기계 설치를 비롯해 빵 생산 준비를 마쳤지만 아직 가동을 시작하지는 않았으며, 단체 대표인 조지 리 선교사가 방북해 공장 가동 행사를 열 예정임.
 - 가동 일자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빵 공장 건립으로 4~6세 북한 아동 5천 명이 빵을 제공받게 되었음.
 - 한편 북녘어린이사랑은 내년에 함경남도 단천에 새로운 빵 공장을 건립하는 등 앞으로 10년 간 함경북도 함흥과 평안북도 구성, 평안북도 정주 등 북한 내 26개 시, 군에 추가로 빵 공장을 세워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한 모금행사도 계획중에 있음.

8. 북한동향

- 北 최고인민회의,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부속문건인 '아동매매, 매춘, 색정문학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11.10, 중앙통신)
-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이 5일 발표되었으며, 지난 9월 9일 유엔 주재 北 상임대표는 유엔본부에서 상기의정서에 서명하였음.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